반론2 �()표시는 미정된 사항

반대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. 반론에 앞서 지금까지의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. 첫째, (gmo 식품의 위험성 내포에도 불구하고 현 표시제의 위험성 수용이 크다는 점). 둘째, (gmo 표시제 강화 시 따르는 경제적 손실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. 그 중 반대측의 개정 시,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.

먼저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비용은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비용만을 고려한 것 입니다.

식품공업협회의 연구에 따르면, gmo 도입 시,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되, 이는 사회적 편익분석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즉, Gmo 표시제 강화 시 발생되는 안정성에 대한 대정부, 대식품 기업의 신뢰도 상승, 소비자의 만족도 상승에 따른 후생효과, 사회적 혼란 저감 등 사회적 비용 저감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, gmo 검사 및 연구시장의 확대에 따른 생명공학 기술 인력의 일자리 창출 등 부가적인 효과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. 다시 말해, gmo 표시제 강화는 장기 전망으로 보면 사회적 welfare(후생)가 더 커짐을 볼 수 있습니다.

또한 단기적 welfare(후생)도 표시제 강화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. 이는 한국의 가공식품 분야 수출 원활입니다. 2014년 5월 삼양라면이 GMO 성분 검출로 터키에서 전량 수입이 거부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. 터키의 GMO 표시제에 한국 식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태였습니다. 이는 현 제도가 표시제 강화에 비해 경제적 손실을 막아준다는 주장에 반증되는 사례입니다. 오히려 표시제 강화 시, 기준 충족으로 가공 식품 분야의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

그러므로 GMO 표시제 강화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반대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.